
 해양수산부	보도참고자료		 [정보] <공공> <소통> <협력>
	배포 일시	2016. 10. 31(월) 총 6매(본문 5, 참고 1)	
담당 부서 및 담당자	불임 담당자 리스트 참고(관계부처 합동)		
보도일시	배포(08:30)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“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「세계 해운강국」으로 재도약”을 위한 방향 제시

-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-

- 정부는 금일 오전,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‘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’를 개최하고, 「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」을 확정하였음
- 현재, 우리 해운산업은 '08년 이후 장기간에 걸친 글로벌 해운시장의 침체와 최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
 - 이에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T/F를 중심으로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, 해운산업 전반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「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」을 마련해 왔음
 - 특히,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/F 활동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선주협회, 무역협회 등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, 전문가와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였음

□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“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해운강국으로의 재도약”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,

- 해운 - 조선, 선주 - 화주간 상생협력 시스템 강화를 기초로, 해운의 3요소인 선박, 화물, 선원 및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였음

(1) 경쟁력 있는 선박확보 지원 확대

□ 첫째, 원가 절감 및 고효율 선박 확보를 통한 선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신규 선박발주 지원체계 확충, ②원가 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, ③해운·조선 상생 생태계 구축, ④세계 지원을 통한 선박확보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음

① 먼저,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 발표한 ‘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’ 규모를 당초 12억불에서 24억불로 2배로 늘렸으며, 지원 대상도 초대형·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, 탱커선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

- 또한, 민간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의 판매사 경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, 해양보증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적격담보 인정기관 확대, 중소선사를 위한 신규보증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하였음

② 선사들의 원가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‘(가칭) 한국선박회사’를 설립하여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고, 장부가과 시가의 차이는 유상증자 등을 활용하여 자본을 공급할 계획

- 이와 함께 캠퍼선박펀드의 중고선 매입 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'19년까지 1.9조원으로 확대하고, 기존 '글로벌 해양펀드'를 개편하여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

③ 해운·조선 상생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‘해운·조선 협력네트워크’를 신설하여 조선소-선사 간 수요·공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친환경선박 발주를 위한 R&D 확대, 소형 조선소의 RG 발행을 위한 금융애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신조 발주 기반도 확대하도록 하였음

④ 또한 기존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 선박등록특구 제도에 대한 재산세, 지방세 감면 혜택 일몰도 연장토록 하였음

[2] 화물확보 및 인력수급 기반 마련

□ 둘째, 선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①**안정적인 화물확보** 기반을 확대하고, ②**선원 및 해운 전문인력** 등 인력수급 기반도 확충할 예정임

① 선사의 국내 수출입 화물 적취율 제고를 위해 선주협회와 무역협회 주관으로 「선·화주 경쟁력강화 협의체」를 구성하고, 합리적 운임과 운송 서비스 품질 개선을 보장하는 **상생협약**을 체결 할 예정

- 또한, LNG, 석탄 등 국가전략 물자의 장기운송계약체결 비중을 확대하고, 수송 입찰 시 **종합적격심사제**를 도입하여 선사의 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을 마련하겠음
- 이와 함께, 국내 제조·물류 업체와 선사의 해외 동반진출을 유도하여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하고, 플랜트 운송시장, 북극해 시장 등 틈새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하겠음

② 선원을 비롯한 **해운 전문인력** 수급 기반도 강화를 위해, **해양대 승선학과 정원**을 확대하고,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선원의 재취업을 위해 **교육프로그램**을 강화하기로 하였음

- 이와 함께, 해운 금융, 법률,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등 각 업종별 전문 인력을 양성도 확대할 계획임

[3]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

□ 해운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①**해운기업의 경영 상황**에 대한 **모니터링** 체계를 강화하고, ②**운임시장 리스크**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충하였음

① 먼저 해운기업 경영 현황을 수시 점검하기 위해 선사별 업황자료 신고를 의무화하고, 신용위험평가* 시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세부평가를 추진할 예정

*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매년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(4~7월) 및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(7~11월)에 대해 실시

-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화 가능 기업은 워크아웃 등을 통해 필요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고, 부실기업은 회생절차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신속히 정리토록 하겠음

② 운임 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**운임공표제**를 내실화하여 시장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고, 아시아 중심의 운임지수를 개발하는 등 해운거래 지원체계도 강화해나가겠음

- 또한, 외항운송사업 등록 기준을 상향하여 부실기업의 시장 난립을 방지하고, 한국선주상호보험 조합의 재보험 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등 국내 선주상호보험의 역량도 강화할 예정

[4] 항만경쟁력 강화로 시너지 극대화

□ 국적 선대규모 감소에 따른 국내 항만의 위축 우려에 따라 ①**환적 물동량 유치** 및 **서비스 효율화** 및 ②**물류거점 확보** 및 **항만환경**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임

① 국내 항만의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, 마케팅 등을 통해 신규 물량을 창출토록 하였으며,

- 국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글로벌 물류·제조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무상제공 등 **파격적인 혜택**을 제공하기로 하였음

- 또한, 터미널 운영사가 항만 하역장비를 대형화·자동화 할 경우, 소요 자금의 이자비용 일부를 항만공사가 지원하는 등 항만서비스의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

② 아울러 항만공사가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의 터미널 운영권 유지·확보를 지원하고,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물류 거점 진출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임

- 이와 함께, 부산항, 인천항의 항로를 확장하고, 수심을 증설하여 항만 입출항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

□ 금일 발표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,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구조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

○ 「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」 등 정부 협의체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, 부족한 사항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음

[붙임]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◇ 「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」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부서		담당과장	담당자
해수부	해운정책과	전재우(044-200-5710)	류선행 사무관(044-200-5715)
			엄익환 사무관(044-200-5716)
	항만물류기획과	이수호(044-200-5750)	전찬수 사무관(044-200-5753)
	선원정책과	김남규(044-200-5740)	이진우 사무관(044-200-5745)
기재부	지역경제정책과	문경환(044-215-4570)	최문성 사무관(044-215-4573)
	대외경제총괄과	김진명(044-215-7620)	윤지원 사무관(044-215-7621)
행자부	지방세특례제도과	김성기(02-2100-3626)	홍자은 사무관(02-2100-3627)
금융위	구조조정지원팀	김선문(02-2100-2930)	이지형 사무관(02-2100-2921)
	산업금융과	안창국(02-2100-2860)	전수한 사무관(02-2100-2861)
산업부	조선해양플랜트과	유법민(044-203-4330)	주세형 사무관(044-203-4332)
	무역정책과	이호현(044-200-4020)	임미정 사무관(044-203-4022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류선행 사무관(☎ 044-200-5715), 엄익환 사무관(☎ 044-200-57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